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차세대 전문가 심포지엄

회의 요약 — 제 1 부: 개회 세션 및 특별 대담

일시:

2026 년 8 월 11 일(화) 오후 3:00-5:30

장소:

고려대학교 상남관 508 호 천신일홀

주최: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IUS), 한미일 3 자 차세대 연구그룹 공동주최

1. 축사 — 박진완

박진완 비엔나대학교 비상근연구원(한미일 3 자 차세대 연구그룹 공동대표)은 축사에서, 기성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가 차세대의 핵심 관심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이신화 교수와 통일융합연구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3 자 차세대 연구그룹을 2025 년 1 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로 소개하며, 한·일·미 차세대 리더 간 대화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정부, 컨설팅, 기술, 싱크탱크, 벤처캐피탈, 인공지능 분야에 걸쳐 약 90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각은 기존 외교정책 담론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진완 연구원은 역내 안보환경이 재편되고 주요국들이 대북 접근법을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도쿄가 수동적으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오늘의 문제의식으로 제시했다. 그는 빅터 차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 논의에 대한 이신화 교수의 최근 《포린 어페어스》 반론을 인용하며, 워싱턴의 차가운 평화가 서울에게는 ‘뜨거운 위험(hot risk)’이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억제·동맹 외교·양자 및 다자 협력으로 지탱되는 지역질서를 요구한다는 논지를 소개했다. 끝으로 오준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마지막 발언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라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며, 한반도 평화가 실재하는 사람들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2. 연구원 소개

사회자인 **안중언** (고려대 석사과정 및 차세대 연구그룹 연구원)은 통일융합연구원의 미션을 소개했다. 지정학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위기가 중첩되는 시대에 '세계와 연결된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지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국지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 공공재를 구성하는 공유된 지구적 책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식과 정책, 현장의 현실과 미래 비전,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국제 연구 허브를 지향한다. 네 가지 핵심 축으로 (i) 글로벌 통일 연구, (ii) 현실에 뿌리내린 정책 혁신, (iii) 학문과 기술의 융합, (iv) 차세대와 함께하는 미래 준비가 제시되었다.

3. 영상 축사 — 하기우다 고이치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유민주당 간사장 대행(제 27·28 대 경제산업대신)은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젊은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특별 대담 — 「한일협력,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다」

사회: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언: 오준 前 유엔대사(現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주유엔 대사 4 차례 부임·10 년 이상 근무)

4.1 국제질서는 해체되고 있는가

이신화 교수는 비관론의 근거들을 먼저 정리했다. 미중 전략경쟁, '크링크(CRINK: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결속, 트럼프발 불확실성,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약화, 그리고 혜택만큼이나 새로운 위험을 동반하는 AI 와 신기술이다. 그는 첫 핵심현 이후 오픈하이머가 던진 자문(自問)을 언급하며, AI 개발자들도 언젠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준 대사는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진단은 **과장**이라고 답했다. 애초에 확립된 질서가 존재하는지부터 불분명하며,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조차” 이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는 정리했다.

오 대사는 이 흐름을 가족사로 설명했다. 19 세기에 태어난 조부는 출생지에서 500 킬로미터 이상 벗어나 본 적이 없었을 것이며, 1952 년 이전 로스앤젤레스에 부임한 외교관 선친은 서울에서 LA 까지 도쿄-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를 거쳐 기차로 내려가는데 나흘이 걸렸다. 국경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으며, 전통적 국민국가 관념에 헌신하는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유엔 체제는 약 200 개국의 주권평등 위에서 있는 반면, 세계는 그 주변에서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시대를 종식시켰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우크라이나·가자·이란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멈출 조짐도 없다. 현실주의적 독해에 따르면 국제질서란 결국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 간 경쟁일 뿐이고, 평화는 갈등의 부재(소극적 평화)에 지나지 않으며,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그러나 오 대사는 이러한 순환론을 거부했다. 그가 보는 것은 **일방향적 발전**이다. 500 년 전에는 민주주의나 인권을 들어 본 이가 드물었고, 40 년 전 프리덤하우스 기준으로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가량이 민주주의 또는 부분적 민주주의였으나, 오늘날 그 비율은 약 70 퍼센트에 이른다. 방향성은 후퇴가 아니라 확산이며, 그 방향에 기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신화 교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진전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각국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공유하고 있는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가 제시한 국제질서 진단은 붕괴도 연속도 아닌 **언번들링(unbundling), 즉 탈정렬(disalignment)**이다. 질서는 존속하되 더 선택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과거 보편적이라 여겨지던 것이 더 이상 보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이제 질서를 *쇼핑리스트*처럼 대하며, 안보·경제·민주주의·무역·기술 등 기능 영역별로 안전과 번영을 기준 삼아 정렬 대상을 고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한국에게는 특유의 활동 공간이 있다. 인도적 위기 대응이 그러하고, 첨단기술 국가로서 신형 안보·기술 이슈의 규범과 법치를 세우는 일이 그러하다. 이 영역에서는 신뢰와 원칙이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4.2 핵무기와 군축의 한계

핵·안보 정세에 대한 질문에 오준 대사는 핵무기가 널리 *궁극의 무기*로 인식된다는 관찰에서 출발했다. 인류사는 곧 무기 발전의 역사로, 돌에서 간 석기와 철기, 활, 총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사거리가 늘고 적을 볼 필요는 줄어들었다. 그 논리는 단순하다. 싸워야 한다면 이겨야 하며, 패배의 대가는 가족과 부족, 국가 전체가 치른다.

1945 년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실전 사용은 핵무기를 그 궁극의 범주에 올려놓았다. 이후 유엔은 군축과 비확산을 추진해 왔으나, 오 대사는 스스로를 **군축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는 무기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무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효과적인 무기* —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죽이는 무기 — 를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다.

그는 기관총을 선례로 들었다. 미국 남북전쟁의 막대한 사상자는 자동화기를 무차별적·비인도적 무기로 금지하자는 국제적 논의를 촉발했으나, 그 논의는 더 강력하고 더 무차별적인 무기가 등장하면서 사그라들었다.

이어 그는 대사 재임 시절 핵군축 운동가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소개했다. 미국이 위성 레이저 무기로 지구상 어떤 표적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겠다고 발표한다면 만족하겠는가? 운동가들의 답은 '아니오'였다. 대체 무기가 더 강력하고 더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실제 반대 대상은 '핵'무기가 아니라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며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범주이며, 그렇다면 운동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준선이 필요해진다. 한 블록을 초토화하고 수천 명을 죽이는 재래식 MOAB 은 허용되고 수십만 명은 허용되지 않는가? 기준을 특정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서 그의 핵심 명제가 도출된다. **평화는 무기 수를 줄여서가 아니라, 국가가 싸울 필요가 없는 세계를 만듦으로써 온다.** 그는 윌 듀랜트가 3 천 년의 역사를 훑어 전쟁 기록이 없는 시기가 200~300 년에 불과함을 확인했으며, 그 기록조차 불완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칸트의 명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표했다. 포클랜드·우크라이나·이란 등 반례로 거론되는 사례들은 결국 당사국이 실제로 민주주의였는지에 달려 있고, 양차 세계대전의 독일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무력분쟁을 줄이는 길은 무기고 축소보다 민주주의의 확산에 있다.

4.3 북한과 세 가지 선택지

북한이 기존 5 개 공식·3 개 비공식 핵보유국에 이어 **아홉 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지구적 핵확산과 동북아 전략균형 모두에 심대한 결과가 따른다. 비핵 이웃국가들로서는 균형의 붕괴를 용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 대사는 한국과 일본에 남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1.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2. 미국의 확장 핵우산을 사실상 자체 보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3. 북한이 비핵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유엔 근무 당시 러시아 대사에게 이 입장을 밝혔고, 모스크바가 한국 정부에 이것이 공식 입장인지 문의해 왔던 일화를 전했다.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분석이었다. 아울러 당시 일본 대사에게 건넸던 농담도 소개했다. 일본 총리가 핵무장을 위한 개헌을 발표한다면, 베이징이 한 주 안에 평양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4.4 비핵화와 '차가운 평화'

이신화 교수는 '비핵화'가 실무 어휘에서 사실상 사라졌으며, 누군가 물을 때만 궁극적 목표로 언급되는 수사로 남았다고 관찰했다. 워싱턴의 의지는 적어도 바이든 시기와 트럼프 1 기까지는 확고했으나, 그는 최근 어느 행정부에서도 북한이 중심 의제였던 적이 없으며 중동과 유럽에 지속적으로 밀려 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도 북한의 위협보다는 반도체·첨단기술·문화 수출 때문이다.

이어 그는 빅터 차(CSIS)의 '차가운 평화' 논의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했다. 그가 읽기에 이 구상은 킬체인 개념을 포함한 압박 수단을 일정 부분 내려놓는 대신 평양이 미국 본토 공격을 자제하도록 하여, 워싱턴이 확장억제만으로 한반도를 관리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의 반론은 이렇다. 이러한 전제 위의 북미 협상은 서울을 배제하고, 김정은에게 남측을 우회할 지렛대와 명분을 더해 주며, 워싱턴의 차가운 평화를 **서울의 뜨거운 위험**으로 전환시킨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사이버 작전과 드론 침투 같은 회색지대 활동이며, 이는 오히려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가 좋을 때 더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 역시 정도는 덜하지만 동일한 역내 안보 여건을 통해 같은 취약성을 공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차가운 평화'는 본래 마이클 도일(컬럼비아대)이 미중 강대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강대국-약소국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오준 대사는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이유에서 '차가운 평화'라는 명명에 반대했다. 이 용어는 전략적 숙고를 거쳐 도달한 입장을 함의하는데, 현 행정부가 그러한 숙고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논리는 전략이 아니라 **단기주의**이며, 북한 문제가 방치되는 것은 그것이 주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양이 추가 핵실험 같은 예상 밖의 행동에 나선다면 세계의 관심은 돌아올 것이고, 주목받는 무대에서 빠지기를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5 북한인권

오준 대사는 북한인권을 다룬 최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 12 년 전,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온 자리 — 에서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의 관행은 국제 사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인권은 다르다. 인권 침해는 인간의 고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북한 출신이며, 따라서 북한에 사촌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고통받는 이들을 자신의 친척으로 여긴다면 일정한 개인적 관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한 그의 진단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북한인권은 **잊힌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나라의 의제에서도 더 이상 상위에 있지 않다**. 익숙해진 탓이기도 하고, 더 시급한 위기들과 경쟁하는 탓이기도 하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모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더 우려하는 쪽은 후자다. 핵무기는 관심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반면 인권은 “살아 있는 문제”, 매일 고통받는 거리 위 사람들의 문제다.

4.6 한일관계와 차세대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오 대사는 “우리는 이웃이니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상투적 정치 화법을 경계했다.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그 반대다. 지리적 근접성은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 적대는 상대의 존재를 인지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근접성에서 도출해야 할 올바른 함의는 양국이 거대한 역사적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정은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신화 교수는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며, 역사와 영토에만 갇힌 관계는 전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그 대안으로 공동의 이익이 거론되지만, 그는 공동의 이익이 **공동의 위협**에 비해 여전히 약한 동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해 육로가 막힌 한국의 사실상 ‘섬’ 조건, 그리고 한일 양국이 역내 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유엔 표결 행태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양자관계의 글로벌 앵커링**이다. 양자 차원의 진전은 어렵고 지역 차원에서는 경쟁적이지만, 평화유지활동과 유엔 관련 의제 같은 글로벌 사안에서는 공통분모가 더 넓다. 지난 30 년의 ‘미래지향적 관계’와 기능적 협력은 정치적·역사적 의제가 부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무너졌으며, 공유된 위협을 규정하지 않는 한 그 패턴은 계속될 것이다.

오준 대사는 한일 양국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잘 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양자와 지역의 틀을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세계화 저항은 결국 무위로 끝날 것이고, 두 나라 모두 지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맥락에서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